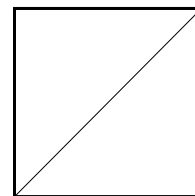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24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8. 26. (제15차)	

(주)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2. 8. 26.

1. 의결주문

(주)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주)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은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주)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직원에 의한 보험 부당모집’,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국외 점포에 대한 현지 감독기관 제재 보고의무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각각 「보험업법」 제209조, 「퇴직급여법」 제48조, 「은행법」 제69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보험업법」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항 제6호, 제209조(과태료) 제2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제4항, 제48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항 제1호,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9]
- 「퇴직급여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5항,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항, 제48조(과태료) 제1항 제2호

-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6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제1항, 제2항, 제41조(권한의 위탁·위임) 제1항 제6호,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3]
-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0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
- 「은행법」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10호, 제65조(권한의 위탁), 제6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1항, 제2항 제1호, 제26조의2(권한의 위탁) 제1항,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3], [별표4]
- (舊)「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1항, 제2항 제1호
- (舊)「은행법」(법률 제17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과태료) 제4항 제7호
- (舊)「은행법」(법률 제1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과태료) 제4항 제7호
- (舊)「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항, 제51조(과태료) 제1항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3]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제3호,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 제8호, 제10호, 제3항, 제4항 제2호, 제3호,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 제3호,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제1항 제4호, 제25조(정보처리시스템의 성능관리), 제27조(전산원장 통제) 제1항, 제2항, 제34조(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제5호
- (舊)「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2020.11.6.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망분리 적용 예외) 제1항, 제3항, [별표7]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별표6]
- (舊)「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17.10.1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다. 관계부서 협의

-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2022.1.27.) 심의필
- 제15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2022.8.18.) 심의필

<별지>

(주)하나은행 및 前 직원 2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주)하나은행 : 과태료 3억 7,6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직원에 의한 보험 부당모집,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법적근거 : 「보험업법」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항 제6호, 제209조(과태료)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제4항, 제48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항 제1호,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9]
「퇴직급여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5항,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항 제48조(과태료) 제1항 제2호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6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제1항, 제2항, 제41조(권한의 위탁·위임) 제1항 제6호,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3]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0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별표6]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항, 제51조(과태료)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제3호,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 제8호, 제10호, 제3항,
 제4항 제2호, 제3호,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 제3호,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제1항 제4호, 제25조
 (정보처리시스템의 성능관리), 제27조(전산원장 통제) 제1항, 제2항,
 제34조(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제5호
 (舊)「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2020.11.6.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망분리 적용 예외) 제1항, 제3항, [별표7]

□ 직원에 대한 조치

- 前 부장 ○○○ : 과태료 150만원
- 前 부장 □□□ : 과태료 60만원

- 조치사유 : 국외점포에 대한 현지 감독기관 제재 보고의무 위반
- 법적근거 : 「은행법」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10호, 제65조(권한의 위탁), 제6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1항, 제2항 제1호, 제26조의2(권한의 위탁) 제1항, 제31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별표3], [별표4]
 (舊)「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1항, 제2항 제1호
 (舊)「은행법」(법률 제17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과태료) 제4항 제7호
 (舊)「은행법」(법률 제1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과태료) 제4항 제7호
 (舊)「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 안건검토 소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안을 수정 심의

- ‘국외점포에 대한 현지 감독기관 제재 보고의무 위반’의 행위자인 前 부장 ○○○에 대한 과태료를 3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前 부장 □□□에 대한 과태료를 48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변경*

* ① 이들이 국외점포로부터 제재사실을 보고받은 후 30일 내에 금감원에 보고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원조치안의 ‘고의’ 또는 ‘중’에서 ‘과실’ 또는 ‘하’로 변경하고,
② ‘22.5.9. 「은행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외점포 제재금액 2천달러 미만인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수정심의 사유(요약)>

(①관련) ●●●●●●(●●)부가 내규상 국외점포에 대한 현지 감독기관 제재사실 보고 책임이 있으나, 국외점포가 제재사실을 알려오지 않으면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되, ●●●●●●(●●)부가 국외점포로부터 각종 정기·수시 보고를 받는 등 정보 입수 수단을 보유하고 있었고, 국외점포의 업무프로세스를 점검하여 개선할 책임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는 하되 위반동기를 변경하여 적용
(②관련) ‘22.5.9. 「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외점포 제재금액 2천달러 미만인 경우 보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제2항)에서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천달러 미만 제재 건을 제외

2. 조치사유

【하나은행】

가.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직원에 의한 보험 부당모집

□ 「보험업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점포별로 2명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보험 모집 종사자 외의 임직원에게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주)하나은행(★★★지점 등 5개 영업점)은 2018.4.18.~2020.5.25. 기간 중 점포별로 정한 보험 모집 종사자 외의 직원 4명(PB)이 본인의 전담고객* 12명에게 (△)△△생명 △△△△△△저축보험 등 ◇◇◇건(보험료 ▽▽.▽억원, 수수료 ■■■.■백만원)의 보험상품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PB의 전담고객에 대한 보험판매 실적은 PB 본인의 KPI에 반영

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33조 제5항 등에 의하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법정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주)하나은행(▲▲▲▲▲▲부)은 2018.7.14.~2020.4.16. 기간 중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은행의 신(新)주소(도로명 주소) 체계 전환 과정에서 퇴직연금 전산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자료가 잘못된 주소지로 발송

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 스마트뱅킹시스템 관련 전자금융거래 무결성 검증 방법 제공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 프로그램(거래전문포함)의 위·변조 여부 등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 (주)하나은행(■ ■ ■ ■ ■ ■ ■ ■ ■ ■ ■ ■ ■ ■ 그룹, 이하 '■ ■ ■ ■ 그룹')은 2016.6.7. 스마트뱅킹시스템(이하 '◁◁◁◁')을 구축하면서, 거래전문의 이중처리(이하 '중복이체')를 방지하기 위한 무결성 검증방법 중 일부를 전자금융거래에 제공하지 아니한 채 운영하였고,

* 이용자의 중복클릭으로 인한 중복이체 방지대책은 제공하였으나, 모바일 무선통신망 환경변화에 따른 IP변경 등 통신망이나 시스템 문제로 인한 중복이체 방지대책은 미제공

- 2016.7.29.~2020.11.6. 기간 중 ◁◁◁◁를 통한 이체거래 시,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다수*의 중복이체가 실행되어 총 ○,○○○○건(○,○○○○명), ●●●,●●●,●●●원의 중복이체 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 이용자의 거래지시 내용이 2~5회 범위 내에서 중복 이체됨

** 2020.11.6. 중복이체 방어로직 적용 후 추가 사고 미발생

(2) 스마트뱅킹시스템 성능관리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5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예방 및 성능의 최적화를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현황 및 추이 분석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주)하나은행(■ ■ ■ 그룹)은 스마트뱅킹(◁ ▷ ▷ ▷ ▷) 구축일*(2016.6.7.) 이후 장애사고 발생일(2019.9.25.)까지 신규 가입자 수 및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시스템 부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추이 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 접속자 수 또는 거래량 급증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하 성능을 확인해야 하는데, ▷ ▷ ▷ ▷ 구축당시 실시(2016.3.7.~5.12.)한 부하 성능 테스트 결과 ▷ ▷ ▷ ▷의 1초당 처리 가능한 최대 거래량(TPS)은 768 수준

** 신규 가입자 수 71.1% 증가(603만명→1,032만명), 총 거래량 92.1% 증가(432백만건 → 830백만건)

*** 초당 최대 거래량(TPS), 응답시간, 피크타임 기준 동시접속자 수 등

- ▷ ▷ ▷ ▷ 구축 이후 장애예방 및 시스템 성능의 최적화를 위해 중앙처리장치(CPU)를 추가적으로 증설하지 않고* 운영함으로써

* 구축시점 대비 2019.5월~10월 기간 중 초당 거래량은 35%(1,033 TPS) 증가, 시스템 응답시간은 약 47%(0.297~0.437초) 증가, 동시 접속자수는 약 70%(6,886~11,688건) 증가하는 등 중앙처리장치(CPU)의 추가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2019.9.25. 10:55~16:17 기간 중 이용자 접속 및 거래량 증가*에 따른 ▷ ▷ ▷ ▷의 성능 부족으로 5시간 22분간 서비스가 지연**되는 장애사고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전월피크일(2019.8.26.) 동시간대(10~11시) 대비 이용 접속자수 35% 증가/이체 거래 12.2% 증가

** 사고 시점의 시간당 이체거래 처리 건수가 전월 피크일 대비 최고 99.3% 감소(14~15시 기준 : 43,577건 → 312건)

*** 사고발생 당일 스마트뱅킹시스템 중앙처리장치(CPU) 용량을 기존 68코어(core)에서 100코어로 32코어(약 47%)를 추가 증설하여 서비스 정상화

- (주)하나은행(■ ■ ■ 그룹)은 검사대상기간 중 운영CRM 시스템 내 이용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손님검색창*’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사용자, 사용일시, 조회내용 등을 자동 기록하였으나 10일간만 보존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 * 영업점 및 조회 권한이 있는 본부직원이 고객 응대 등을 위해 고객을 검색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의 성명 등을 입력하여 검색 시, 일치하는 이용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가 일괄 조회

(4)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舊)「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을 금지(이하 ‘망분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 망분리 예외를 위한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 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 승인된 프로그램만 설치·실행토록 하는 단말기 보안 강화 대책 등(「전자금융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7])

- (주)하나은행(◀◀◀ 본부)는 임직원 업무용 단말기에 대한 망분리 환경을 구축(2014.8월)하고 업무상 필요로 인한 망분리 예외를 허용* 하면서, 2017.11.1.~2020.11.6. 기간 중 승인된 프로그램만 설치·실행 토록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여**

* ‘행정안전부 관련 업무를 위한 LDAP서버 접속’을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 기관과 연결해야 하는 망분리 예외적용 처리 대상으로 지정·운영(2017.11.1.)

** 다만, 외부로부터 유입된 실행파일이 단말기 운영체제(OS)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위협행위(MBR, 서비스 등록, 커널 드라이버 등록, 레지스트리 변경, 인젝션 등)를 수행할 경우, 이를 차단하는 검역소 솔루션(☞☞☞☞☞☞☞)을 도입·운영 (2014.12.22.)

- 前영업점 직원 ♥♥♥(♣♣지점 소속, 2018.7월 퇴직)이 부정 금융거래를 계획한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2017.11.10.~2018.4.30. 기간 중 업무용

단말기 및 계정계 환경을 파악할 목적으로 ㉔㉔개의 미승인 프로그램*을 실행**(총 ㉔,㉔㉔회)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외부 이메일을 통해 범죄조직으로부터 미승인 프로그램을 수신하고 이를 은행 내부망으로 유입

** 실행을 시도한 총 ㉔㉔개의 프로그램 중 ㉔㉔개 프로그램은 실행이 완료되었으며, ㉔㉔개의 프로그램은 실행 후 검역소 솔루션(㉔㉔㉔㉔㉔㉔㉔)에 의해 차단되었음

(5) 전산원장 변경 통제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 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수립·운용 하여야 하는데도,

○ (주)하나은행(㉔㉔㉔그룹)은 검사대상기간 중 계정계(상품처리) 시스템 내 자동이체원장조회 화면*을 통해 전산원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 하면서 동 화면에 대해서는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적용하지 않아,

* 계정계(상품처리)시스템의 하부 메뉴로 자동이체 처리(매일 03:00~ 23:50)시 예외상황(대상정보 오류 및 누락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오류원인 파악 및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

○ 담당 직원(㉔명)이 동 화면을 통해 총 ㉔㉔㉔회에 걸쳐 전산원장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후내용을 자동기록 및 보존하지 않았고,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해 제3자가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6)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암호화 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주)하나은행(㉔㉔㉔그룹)은 검사착수일 현재(2020.10.12) DMZ구간에서

운영하는 ‘■■■■ ■■■■■■■■■■’ 및 ‘◆◆◆ ◆◆◆◆◆◆◆◆◆◆◆
◆◆◆◆◆◆◆◆’ 서버에 총 XXX건의 이용자 정보(영문이름, 카드 결제
금액, 가맹점 정보 등)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사실이 있음

【前 부장 ○○○ 및 前 부장 □□□】

라. 국외점포에 대한 현지 감독기관 제재 보고의무 위반

□ 「은행법」 제47조 제10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주요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하여야 하는데도,

- (주)하나은행(●●●●●(●●부)은 2015.10.12.~2019.8.15. 기간 중
국외현지법인(☆☆☆☆☆ KEB하나은행 등 4개 법인) 또는 국외지점
(☞☞☞지점 등 2개 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총
♠♠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고
최소 31일에서 최대 1,275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금액(원화 환산)이 10만원
이상인 건만 제재대상에 포함하였음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3.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4.~5. (생 략)

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비슷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09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가 제83조제2항 또는 제10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⑦ (생 략)

□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①~③ (생 략)

④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은 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의 본점·지점 등 점포별로 2명(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10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40조제4항에 따라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4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만원)
커.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가 법 제83조 제2항 또는 제100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	6,00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6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① 법 제33조제5항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2항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이 영 제17조, 제18조, 제32조제1항제1호 마목 및 사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2. 법 제25조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이 영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권한의 위탁·위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6.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만원)
마.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할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 제2호	1천만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할 것. 다만,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은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
 -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 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 라.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3.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

제10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 영 제36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다.

□ 「은행법」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9. (생 략)
10. 그 밖에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

제65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9조(과태료) ①~④ (생 략)

- ⑤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舊)「은행법」(법률 제17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과태료) ①~③ (생 략)

④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2018.12.11>

7.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 (舊)「은행법」(법률 제1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과태료) ①~④ (생 략)

⑤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정관변경 등의 보고) ① 은행은 법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회사등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반기마다 보고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미합중국 화폐 2천달러 미만의 금전 제재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는 때

2.~4. (생 략)

제26조의2(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에 따라 별표 3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생 략)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26조의2제1항 관련)

37. 법 제47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만원)
허.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69조 제5항제7호	200

□ (舊) 「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정관변경 등의 보고) ① 은행은 법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회사등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반기마다 보고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는 때

2.~4. (생략)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만원)
허.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69조 제4항제7호	100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②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 4. (생략)

② ~ ④(생략)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바.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0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 부터 제3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및 예산 부문
2. 건물, 설비, 전산실 등 시설 부문
3. 단말기, 전산자료,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
4. 그 밖에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할 것
9. 주요 백업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증할 것
10. (생략)
11.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은 1년 이상 보존할 것
12. ~ 14. (생략)

②(생략)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단말기를 통한 이용자 정보 조회 시 사용자, 사용일시, 변경·조회내용, 접속방법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자동적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그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④ 제1항제11호의 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접속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기록·유지되어야 한다.

1.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일시, 접속자 및 접근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기록
2. 전산자료를 사용한 일시, 사용자 및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기록
3. 정보처리시스템내 전산자료의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로그인, 액세스 로그 등 접근기록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단, 업무상 불가피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5. (생략)

② ~ ⑥ (생략)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할 것(다만, 거래 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25조(정보처리시스템의 성능관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예방 및 성능의 최적화를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현황 및 추이 분석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전산원장 통제) 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별도의 변경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에는 변경 대상 및 방법, 변경 권한자 지정,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 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29조(프로그램 통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 (생략)

2. 프로그램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관리할 것

3.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을 것

4. ~ 5. (생략)

6.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할 것

7. ~ 10. (생략)

제34조(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프로그램(거래전문포함)의 위·변조 여부 등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

□ (舊)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2020.11.6.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망분리 적용 예외) ①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 통신망에 연결된 단말기가 업무상 필수적으로 외부기관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다만, 이 경우 필요한 서비스번호(port)에 한하여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할 수 있다).

2. 규정 제12조의 보안대책을 적용한 단말기에서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망으로부터 내부 업무용시스템으로 원격접속 하는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별표 7>에서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별표 7>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신설 2015.9.17>

대책	세부사항
내부망 보안 강화	- 업무망에 반입되는 전산자료 대상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진단·치료 대책 수립
외부망 보안 강화	- 지능형 해킹(APT)차단 대책 수립 - 외부망을 통해 전산자료 외부전송 시 정보유출 탐지·차단·사후 모니터링 대책 수립
메일 시스템 보안 강화	- 본문과 첨부파일 포함하여 메일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예방 대책 수립 - 메일을 통한 전산자료 외부전송 시 정보유출 탐지·차단·사후 모니터링 대책 수립
단말기 보안 강화	- PC 사용자의 관리자 권한 제거 - 승인된 프로그램만 설치·실행토록 대책 수립 - 단말기 전산 자료 암호화 저장
원격 접속 통제 수립	- 원격접속 기준 및 절차가 포함된 보안정책 수립 - 불법 원격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인증,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 - 원격접속은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사전 등록자에 한하여 허용하며 원격접속 관리 기록부를 기록·보관 - 원격에서 접속하는 외부 단말기와 내부 업무용 시스템 구간의 암호화 통신 - 원격접속 사용자는 아이디·비밀번호 이외에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 - 원격에서 접속하는 외부 단말기의 악성코드 감염 예방 대책 수립·적용 - 원격접속 가능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의 접근 통제 수립·적용 - 원격으로 접속하여 수행한 모든 작업 내역 기록하고 매일 이상여부 점검 실시 및 책임자가 확인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 (1) 규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 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 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 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임직원
-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2.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 「보험업법」 제100조제1항제3호 및 제209조제2항(모집자격이 없는 임직원의 보험모집)

- (1) 위반건수 : 무자격 임직원의 수
- (2) 예정비율의 산정
 - 1) 중 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수취한 판매수수료 600만원 이상
 - 2) 보 통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수취한 판매수수료 400만원 이상
 - 3) 경 미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수취한 판매수수료 400만원 미만

□ (舊)「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17.10.1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20.>

- (1) 중 대 :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개정 2013.12.20>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단순법규 위반 등을 의미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보험과 자산운용과 전자금융과	일반은행검사국 IT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82 02-2100-2945 02-2100-2661 02-2100-2975	02-3145-7062 02-3145-7429